

“14억 들여 진출입로 없는 도로 개설”

전주시의회 허승복 의원 시정질문 “청년 상상놀이터가 자기 계발·창업 지원 등에 효용성 있을지 의문”

전주시의회 허승복 의원(사진)이 전주시가 한옥마을 인근에 진출입도로도 없는 상태에서 14억원을 들여 개설한 도로가 제구실을 못하고 주차장도 없고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승복 시의원(중앙동, 풍남동, 노송동)은 2일 제33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시정질문에 나서 “전주시가 공약사업으로 제시한 복지도시 사업은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도 정작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도로 개설 사업은 엉망으로 이뤄져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허 의원은 “전주 한옥마을 인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사가 진출입로도 확보하지 못하고 차량 한 대도 통과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사가 이뤄져 주차장으로 방치되고 있다”며 부실한 도로 개설 책임을 따져 물었다.

허 의원은 “전주시가 14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도로를 개설했는데 진출입로가 연결되지 않아 예산만 낭비하고 지역민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며 부실한 시정 운영을 질타하고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허 의원은 또 전주시가 추진하는 삼천 반딧불 생태마을 조성사업과 덕진공원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중복돼 예산 낭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미 덕진공원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추진 중인데도 구태여 다시 삼천에 반딧불 생태마을을 조성하는 것보다



농성 중 통화하는 정진석 원내대표 (왼쪽 두번째)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의장이 우병우 시위를 제한한 바 있다.

는 장기적 과제로 덕진공원에 집중적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이 합리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허 의원은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허 의원은 “전주시 역시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청년 협력계를 신설하고, 탄소산업과

일자리창출계에서도 청년실업문제 해결하기 위해 청년 창직·창업 지원사업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시장 공약사업인 청년 상상놀이터가 청년의 자기 계발과 창업 지원 등에 효용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허 의원은 “이미 전북대학교에서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무한상상실이 청년들의 창업기회와 창업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 검토해 본 적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전주시 청년 상상놀이터가 전북대 무한상상실과는 다른 차별화된 청년 일자리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재 기자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맞춤형 사업 선정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무장)은 지난 1일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6년 지역수요 맞춤형사업’ 사업으로 전북 장수군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조성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지역수요 맞춤형사업은 낙후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올해 총 22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장수군의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조성’ 사업은 전북 장수군 계남면에 225,633㎡의 면적에 23억 3,000만원 상당의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하고 체험할 수 있는 ▲ 레드푸드(홍로사과, 한우, 오미자 등) 직판장, ▲ 레드푸드 가공체험장, ▲ 레스토랑, ▲ 행사(이벤트) 광장 등을 조성하게 된다.

안호영 의원은 “레드푸드 융복합센터가 조성되면 장수군의 지역농산물유통센터, 장수식품클러스터와도 연계하여 농식품 판매, 체험관광, 직거래 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각 해당 군과 협력하여 지역사업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철, 권은희 1심 무죄 불복·항소

김철이 김용환(57)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42·여) 의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김철 관계자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증언임을 인정했으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등에 비해 충분히 위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사실오인 및 불리오해의 점을 닦기 위해 항소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서울 수사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했던 권 의원은 김 전 청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청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만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만류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4년 7월 “거짓 진술을 했다”며 권 의원을 모태위증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8월 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의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더라도 주관적 인식·평가나 법률적 견해에 해당하므로 위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고미희 “복합문화 복지시설 건립을”

전주시의회 고미희 의원은 복합문화 복지시설 건립을 제안하고 나섰다.

고미희 시의원은 2일 제33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시정질문에서 “시대 변화에 대응한 복합문화 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미희 시의원은 “전주시에서는 현재 24시간 돌봄·보육센터, 노인복지관, 청소년 문화센터 등으로 복지시설이 따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출산,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모두 아울러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복합문화 복지시설 건립이 필요하다”고 또 고 의원은 “24시간 돌봄·보육센터 건립은 맞벌이 부모의 보육부담을 줄이고 야간경제활동이 필요한 맞벌이부모와 한부모 가정의 경우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24시간 돌봄·보육센터 건립 추진을 요청했다. /김영재 기자

“대형화물차 불법 주정차·밤샘주차” 강력 단속을

이완구 의원 시정질문, 전주시 불법 밤샘주차 과징금 부과 총 64건 930만원 그쳐

전주시의회 이완구 의원은 도심 도로변 대형화물차 불법 주정차와 밤샘주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완구 시의원(서신동)은 2일 제33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시정질문에서 “도로 위의 흉기”로 불리는 대형화물차량의 불법 주정차와 밤샘주차 문제로 지역민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전국적 공포의 대상이 된 대형 교통사고는 대부분 도심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한 대형화물차량이 교통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차고지에 있어야 할 대형화물차량이 버젓이 주택가에 불법으로 주차되고 있는 상황에서 애

꿋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따르면 ‘화물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대형화물트럭 및 버스 등이 운송사업 등을 경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고 지정된 장소에 해당차량을 주차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지정된 차고지에 있어야 할 대형화물차량이 주택가와 이면도로 등지로 파고들어 불법 주정차, 밤샘주차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해묵은 난제인 대형화물차량의 불법 주정차 및 밤샘주차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며 “인천광역시의 경우 대형화물차 불

법 밤샘주차 행위 집중 단속으로 지난해에만 총 3,570건의 화물차 불법주차를 단속, 1억8304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반해 전주시의 불법 밤샘주차 과징금 부과 건수는 덕진구 40건, 완산구 24건으로 총 64건으로, 930만원 과징금 부과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밤샘주차 시간이 아닌 퇴근차량이 많은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도 주요 도로에 주차된 대형화물차가 많이 볼 수 있다”며 “다른 주행 차량의 시야확보를 방해, 교통정체와 교통사고 위험이 되는 대형 화물차량의 주차 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조운선 청문회보고서 ‘부적격’ 야당 단독 처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2일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 야당 단독으로 조운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의견을 처리했다.

야당은 보고서를 통해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지녀야 할 도덕성, 준법성 등에 문제가 있다며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번 청문회는 새누리당이 야당의 누리과정 예산 단독 증액 의결에 항의,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치러져 ‘반쪽 청문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청문회보고서 채택 역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만 이뤄져 ‘반쪽 채택’이라는 오명을 면치 못하게 됐다. /뉴시스

전라북도 |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세계는 무주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2017 전북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6.22-30 (9일간)